

시선

사설

‘혁신’은 구호가 아닌
구성원의 ‘삶’이다

오는 3월에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한다. 내년 3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조직은 ‘총장과의 대화’와 ‘경희 미래리포트’ 등을 통해 수렴된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고 대학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구상되었다는 전언이다. 지난 합동교무위원 연찬회에서 언급된 바, ‘대학의 문화, 인식, 구조 등을 바꿔’ 나가겠다는 이 조직의 지향가치는 명칭에도 포함돼있듯 ‘혁신’이란 단어로 대변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지만, 사실 혁신이란 그리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단지 혁신의 최종성과와 열매만이 참대해보일 뿐, 정작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지난하리만큼 세밀하고 정치(精緻)해야 하며 그 와중에도 지속적 인 추진력과 항상성을 지녀야만 한다. ‘2019년까지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진입’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담은 이 혁신위의 출범을 목도하며 몇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혁신’이 지나는 위와 같은 성격 때문이다.

우선, 우리에게는 다함께 공유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바로 지난 2014년에 발표되었던 ‘재정 현황 및 행·재정 개선 방안(행·재정 개선 방안)’이 그것이다. 당시 우리 대학은 ‘조직의 슬림화’를 표방하며 그간 이어져온 행정·재정적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고자 행·재정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목적과 계획이 모두 명확해 보였던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어느덧 행·재정 개선 방안은 추진력을 잃고 그 모습을 시나브로 감추고 말았다. 지속적인 추진력과 항상성이 휘발된 탓이다.

그리고 이제 기존 행·재정 개선 방안의 자리를 혁신위가 대체한 형국이 되었다. 이전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 혁신위에 대해 구성원이 이전의 사례와 변별되는 지속적인 추진력과 항상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더불어, 세밀하고 정치(精緻)해야 하는 ‘혁신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혁신이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사회의 적극적인 공감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혁신의 과정이 세심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이들 구성원을 ‘혁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릇된 관점이 틈탈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그 ‘혁신’에 대한 구성원의 동참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무릇, 구성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은 그 구성원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것이다. 각 구성원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구성원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의 길이다. 하지만 현재 드러나 보이는 혁신위의 청사진 상에는 거시적인 그림들만이 확인될 뿐, 정작 구성원의 삶과 밀접한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혁신’이 삶이 아닌 구호가 될 때, 구성원은 피로감을 느끼고 그 혁신에 대해 공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출범한 혁신위가, ‘그 미래로 가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고민해가길 바란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동참과 성원 속에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이번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

사회교육원생 동문 지위 부여
둘러싼 논란

미디어 여론동향 2016. 02. 15 ~ 02. 2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제2차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가 지난 11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광세홀에서 열렸다. 이 날 등책위에서는 등록금 논의 이외에도 ‘단과대 학별 교비 측정’, ‘SPACE21 사업 진행’ 등 각종 교내 쟁점사항들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박재성 계장은 “단과대학 교비지원은 단과대학별 규모와 등록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율예산으로 편성해 자율 예산위원회에서 산식을 통해 책정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외에 여러 현안 논의했지만 뚜렷한 답은 못 얻어/대학주보 온라인, 2016.2.17) 다음 제3차 등책위는 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수강신청 이후 과목 폐지 일방적 공지

행정실은 ‘학생’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조민호 기자
luve5678@khu.ac.kr

재학생에게 ‘졸업 기준 아느냐’고 물어보자. 재학생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소속 대학 행정실에 문의한다고 답할 것이다. 왜 행정실에 문의할까? 대학 행정실은 학사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학교기관이기 때문이다. ‘행정실’은 학생을 위해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대학 과목 교육과정을 개정·인준·폐기하고, 관련 문의사항 답변까지 맡는 등 말 그대로 학생의 편의를 위한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호 텔관광대학(호관대)에서는 수강 신청을 이미 완료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공 필수 과목의 폐지를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폐지 공지가 늦은 점이나 대체과목에 대한 설명도 부신했다. 기자는 이번 사태를 보며 행정실 업무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됐다.

호관대 강좌폐지 문제와 같은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2학기 희망과목 담기 기간 중 경영대학의 갑작스런 전공과목 시간 변경 문제가 있었다. 2012년에는 자율전공학과 행정실이 타 단과대 학부, 학년 전용 강의를 자율전공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없었던 문제를 방지하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생의 불편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실의 태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호관대 행정실은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한다. 해당 과목을 폐지·인준하기 위해 학사지원과에 자문을 구하고, 교수들의 동의를 얻고, 대체 과목의 신설까지 확정해야 공지를 할 수 있으니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정실이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 자신들의 존재의미인 ‘학생들’ 그 자체다. 이번 사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학생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간표를 다시 짜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이 학생의 현 상황에 맞춰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 행정실은 학생의 편의보다 행정적인 절차를 앞세우고 있어 목적이 전치된 모습이다.

늦은 학사 공지만이 문제는 아니다. 행정실이 품은 여러 문제들 중에서 하나가 불거졌을 뿐이다. 이번에 취재한 많은 일반 학생은 비단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실의 답변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실은 당연히 해당 대학 학사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의 운영 사항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행정실이 모른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가?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면, 얼마든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을 위한’ 최대한의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나라고 생각한다. 입학방법도 다르고, 수료 학기도 다른데 졸업하면 같게 된다니요”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25개의 ‘좋아요’와 24개의 댓글로 반응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힘 빼지는 소리 하지 말라”는 류의 입장과 “학부생과 교육원생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므로 어딜가서 소속을 밝힐 때 사회교육원생임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칭이라고 생각된다”는 류의 입장으로 나뉘었다.

학부 구조조정에 나선 경희대학교가 사회계열 학부를 대거 통합해 3년 내에 ‘미원대학’(가칭)을 설립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단독]경희대, ‘미원대학’ 신설 추진…3년내 사회계열 학과 대통합/머니투데이, 2016.2.17) 지난 1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경희대 미원대학 설립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캠의 국제대학, 자율전공학부가 서울캠으로 이전해 타 학부와 통합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된다. 한편, 경희대 관계자는 “아직은 아이디어일 뿐이며 본부가 강제로 추진하는 계획이 아니다”라며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세시봉

김도엽 <뉴스팀장>



최근 국회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통 부재로 무제한 토론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시간강사 45명에게 급작스러운 해촉 통보 메일을 보냈다. 2달이 지난 묵은 이야기지만 학교의 새 구성원들에게 우리학교의 소통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후마 측이 제시한 해촉의 배경은 ‘해당 교과목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후마 행정실은 해촉의 배경에 해촉할 수 밖에 없었던 힘든 상황이 있었음을 밝혔다.

우리 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작년 2학기 기준 49.3%로 사립대학 전체 평균 63.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매년 실시하는 대학평가의 항목 중 하나기 때문이다.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이 항목에서 우리 학교는 40위권 밖의 순위를 기록했고 따라서 본부의 의도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규정에 있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세심한 배려·소통은 불가능한 것인가

지금까지 기사를 비롯해 우리신문 역시 전임교원 확보율과 강의담당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해왔다. 이번 후마의 결정은 학교 차원에서 보면 이익이다. 하지만 시간강사 45명을 해촉하며 학교가 얻은 것은 지표의 약 4% 상승이다. 시간강사의 비중이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전임교원 비중이 약 4% 오른 것이다. 물론 이번 해촉은 학교 규정과 관련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학교 시간강사 규정은 ‘시간강사는 강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통 없는 일방적 해결은 각 건물마다 걸린 후마 채호정 시간강사의 대자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소통의 부재는 우리학교 프라임사업과도 연관이 있다. 기자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열린 몇 차례의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에 참석했다. 대학 본부는 프라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항상 강조했다. 물론 사업이 중대하고 우리학교의 아이디어를 타 학교에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단과대가 조정의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다.

SNS에서 화제였던 ‘유재석 소통의 법칙 10가지’ 중 한가지 구절이 생각난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라는 구절이다. 이번 채호정 시간강사가 대자보에 쓴 것처럼 ‘교과 운영 과정에서 강좌가 폐지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합당한 절차와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함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학교와 시간강사 간 소통이 없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학교안의 모든 문제를 구성원과 소통할 순 없지만 사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많은 구성원들이 관련된 문제에는 치열한 소통이 필요하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이서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경정 02-441-7317(미래7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